

투표권법

우리의 투표권을 보호하는 법의 갱신과 원상회복

수 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투표권법(VRA)의 보호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투표권법은 가장 효과적이고 중요한 민권법들 중 하나로 널리 간주되어 왔습니다. 투표권법의 일부 규정은 항구적인 내용으로서 차별에 대한 중요한 보호장치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투표권법의 극히 중대한 3 개 조항은 한시적이기 때문에 의회가 이 조항들을 갱신하지 않으면 2007 년에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들 3 개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 주와 카운티는 자신들의 선거법과 절차를 변경하기 전에 연방 승인을 받을 것을 명령함(제 5 절).
- 언어 지원이 필요한 시민들이 투표 접근을 거부 당하지 않도록 함(제 203 절 및 4(f)4 절).
- 법무부 장관에게 선거를 모니터하기 위한 연방 조사관 및 참관인을 파견하는 권한을 부여함(제 6 절-9 절).



이들 보호 조항이 의회에서 갱신되지 않으면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투표권과 자신들이 선택한 후보자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40 년 간 이룩한 진보가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이제 행동이 필요한 때가 왔습니다!

40 년 간 이룩한 진보

투표법은 투표세 및 문자 해독 능력 테스트 같은 관행에 종지부를 찍으면서 투표의 인종적 차별을 금지했습니다.

또한 투표법은 역사적으로 불충분하게 대표된 커뮤니티에 선출직의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예를 들어, 1964년에는 흑인 선출직 공무원이 전국을 통틀어 300 여명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9 천 100 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시아계 선출직 공무원 수는 203 절의 시행

이후 거의 3 배 늘어났습니다. 또한 투표법은 전국의 6 천여 라틴계 공무원 중 상당수가 전국의 선출직 또는 임명직에 진출할 수 있는 정치적 과정을 개척했습니다.

유권자에 대한 차별 방지

투표법은 유권자를 차별한 전력이 있는 주 및 지방 정부가 선거 관행 또는 절차를 변경하려면 법무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을 통해 투표 관계법의 여러 유해한 변경 조항들의 시행을 적발하고 방지할 수 있었으며 의회 의원들과 지방

공무원들이 차별적인 변경을 고려하는 것을 단념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투표법 덕분에 법무부는 투표소와 개표 활동을 참관하고 차별적인 행위를 방지하며 기록하도록 연방 참관인과 조사관을 파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항들은 투표권 행사에 대한 차별이 있어왔고 중대한 문제가 계속 되고 있는 장소에 중점을 두면서**

유권자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모든 유권자들의 발언권 확보

많은 영어 사용 유권자들이 복잡한 선거 자료와 분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쟁은 언어 지원이 필요한 원주민 미국인, 아시아계 및 라틴계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한층 치열합니다. 투표권법은 정보에 근거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이들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사용할 투표권법 공교육 전단 - 초안 2005년 11월 7일

**의회가 투표권법의 임시 조항들을 갱신하지 않으면
영어가 유창하지 않은 유권자들은 투표에서 배제될 수
있는 위험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고 참여하십시오

우리나라는 1965년부터 유권자의 권리가 크게
발전해왔지만 평등을 위한 투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재에 이르러서도, 지방 공무원들이 소수 유권들에게

투표 접근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투표권법은 소수 투표권을 보호하고 과거로의 회귀를
막기 위해 갱신되어 회복되어야 합니다.
**투표권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투표권법의
갱신과 회복의 중요성에 관해 다른 사람들을 교육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다운로드 받으시고, 자신의
지역에서 행사를 찾거나 행사 계획이 있으시면
www.RenewtheVRA.org를 방문하십시오.**